

학생 수 감소로 초등교사가 중학생 가르치는 길 열릴까

학생 수 줄고 통합학교 증가...자격 개편 필요성 ↑
연말 개편방향 제시...내년까지 정책연구·의견수렴
고교학점제·융합교육 대비...복수전공 우대도 검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11월 완료한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대·사범대 졸업 후 임용시험을 치르던 기존 교원양성체계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교대와 종합대학 사범대 통합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양성과정 통합 ▲수습교사제 도입 ▲학부과정 심화(4+2) 등 다양한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의 이번 정책연구는 교원자격에 초점을 맞췄다. 이미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미래형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를 초등교사와 중·고교 교사 자격간 두터운 벽을 허물고 중·고교 교사 역시 과목별 칸막이를 낮추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 주로 담길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충분히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교육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양성·자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진작 제기됐다. 학생 수 감소, 특히 구도심과 농·산·어촌의 학생 수가 줄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운영되는 통합학교가 늘어나는 추세

학령인구 급감·미래형 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초등·중등교원 자격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이 올해 하반기 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자격체계 개편 관련 정책연구를 위탁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중 연구자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 열린 '해누리초중이음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해누리초중이음학교는 일반학급 47학급(초 25학급, 중 22학급), 특수학급 2학급 등 49학급 규모로 개교한 서울의 첫 통합학교이다

〈표 1〉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시기	통폐합 기준	통폐합 학교수* (폐지 학교수**)			추진주체 및 지원
		초	중	고	
1982~1998	81년 9월 180명 이하, 6학급 이하 4Km내 인근학교가 있는 경우 93년 9월 50명 이하 51~100명은 단계적 통폐합 혹은 분교장 개편 97년 8월 당초사적 해산 특례	3,393 (2,023)	68 (58)	20	사·도교육청 자체 추진 영세사립의 해산 특례
1999	98년 8월 초중등학교 모두 분교 100명 이하 분교 20명 이하 1면 1분교 원칙	749 (568)	45 (29)	4	지방자치단체(577억원) 분교폐지, 통합 운영(94억원) 분교장 폐지(39억원) 분교장 개편(282억원)
2000~2005		395 (333)	64 (57)	15	교육부 기준 제시 사·도교육청 자율 추진
2006~2011	2006년 국정연구조정회의 통폐합 추진 결정 2006년 60명 기준 제시 (84인양성 도사범지대, 반대 삼각지역, 학생수 증가 예상지역,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289 (273)	48 (46)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577억원) 중앙정부 통폐합 재추진 분교폐지 통합운영(104억원) 분교장 폐지(39억원) 분교장 개편(282억원)
2012~2015	통폐합기준을 각 사·도교육청에 이양(현재까지 유지)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면, 도서벽지, 중: 60명 이하 도사: 200명 이하	227 (210)	45 (42)	19	통폐합 지원금 확대 분교 폐지 중·초-시지역(60억원), 기타지역(30억원), 중·고(100억원) 분교장 폐지(104억원) 개편(1억원) 신설, 대안교육 초등(300억원), 중·고(600억원) 통합운영·시설개선(200억원), 미래세(100억원)
2016~	적정규모,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 면, 도서벽지: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사지역: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	-	-	-	지역중심에서 학교 규모 기준으로 개편, 지원액 상향 조정
계		5,063	270	73	

* 통폐합 학교수: 폐지 분교 + 폐지 분교장 + 분교장 개편
** 폐지 학교수: 폐지 분교 + 폐지 분교장
한국 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2015년까지 통폐합한 소규모 학교는 초등 학교 5053개, 중학교 270개, 고등학교 73개 등 약 5400개 학교가 통폐합했다.

이기 때문이다. 서울도 올해 처음 통합학교(이음학교)가 문을 열었으며 2023년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지역에서는 통합학교를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서로 호환되지 않아 교원을 활용할 때 비효율성이 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 등 학령인구 급감의 타격을 받는 지역 교육감들은 지난 1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통합학교 교사자격의 호환을 허용하는 교원자격제도 개편 방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제안해 논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자격 취득자가 주기적으로 새로운 교육내용과 교수법을 배우는 보수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중·고교 교사(중등교사) 자격증이 있어도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초등교사가 중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도 초중등교육법상 별표로 담긴 '교사 자격 기준'에 따르면 가능하다. 중·고교 교사는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을 갖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 교사는 중

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갖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격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과거에도 교육부는 2001~2003년 한시적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2년간 교대 교육을 받으면 초등교사로 임용한 바 있다. 교직 사회의 반발에 직면해 더 이어지지 못했다. 실제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시기상조'라는 결론과 함께 유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미 교원자격체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교육부가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응 로드맵에도 중장기적 교원양성·자격체계 개편을 위한 큰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

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역사회 밀착형 복지시설과 복합화하거나 통합학교 형태로 바꾸는 방안이 골자다.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소규모 학교는 '적정규모화'란 명분으로 통폐합을 유도해온 바 있다.

내년 마이스티고부터 단계별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만큼 교육부 정책연구에는 복수전공 교사 우대 정책을 검토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학교육과 소프트웨어교육 자격을 취득한 이에게 임용 혜택을 주거나, 임용된 후 다른 전공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연수를 받으면 교원성과급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뉴스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